



농정포커스

제101호(2015. 1. 15.)

2015년 주요 농정이슈

황의식 이계임 성주인

KREI

한국농촌경제연구원

2015년 주요 농정이슈

황의식 이계임 성주인



1. 2015년 한국농업 여건 전망	1
2. 2015년 주요 농정이슈	4
1) 농가경영위기관리 강화	4
2) 농업의 미래성장동력 확충	5
3) 농식품 수출활성화대책 강화	6
4) 발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수립	7
5) 농산물 수급관리대책 강화	8
6)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재구축	9
7) 바른 식생활, 안정적 소비 기반 확충	10
8) 지역단위 농촌정책 기반 마련 및 역량 제고	11
9) 사회적 경제로 주민 서비스 수요 대응	12
10)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	13
11) 국제농업 개발협력과 농업의 글로벌화	14
12) 통일준비시대의 농업협력대책	15

감 수	최지현	선임연구위원	02-3299-4122	jihchoi@krei.re.kr
내용 문의	황의식	선임연구위원	02-3299-4234	eshwang@krei.re.kr
자료 문의	성진석	선임전문원	02-3299-4212	jssaint@krei.re.kr

- 「KREI 농정포커스」는 농업·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.
-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(www.krei.re.kr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요 약

- **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은 불확실한 요인이 많을 전망**
 - 세계경제의 침체 및 한국경제의 저성장기조 전망, 달러화 강세 및 엔화 약세 등 악제 속에서도 유가하락으로 농자재가격의 안정이 전망
 - 쌀 관세화, 한·중 FTA 체결 등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은 축소되었지만 농가의 대응에 따라 특정 품목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되므로 수급관리가 중요
 - 농가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의 미래산업화 성장동력 확충이 중요한 과제
 -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에 따른 통일농업,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새로운 과제 대두
- **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가경영 위기관리 능력 제고**
 -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실효성 제고, 수입보장보험의 도입, 재해보험의 내실화
- **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의 정책과제 추진**
 - 농업 R&D 효율화 및 실용화, 자본유입을 위한 규제완화, 농업금융 효율화 등
- **농업구조의 고도화,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수출농업 활성화**
 - FTA 활용 수출전략 수립, 계열화 수출선도조직 육성, 비관세 공동대응체계 구축
- **그동안 투자지원이 미흡한 발농업 경쟁력 강화**
 - 노지밭작물 중심의 기반정비 추진, 주산지 조직경영체 육성, 성장품목 정보 제공
- **선제적 농산물 수급관리대책의 강화로 농가경영안정과 소비자 후생 증대**
 - 생산자조직 중심 수급관리대책, 계약재배 및 계약거래 활성화, 정부 역할 재조정
- **가축전염병 상시화에 대응한 질병관리체계의 평가와 재구축**
 -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재구축, 농가자율 방역강화, ICT 기반 방역지원시스템 구축
- **소비자교육 강화로 올바른 식생활 구축, 국민영양보장의 국민건강 농업정책 강화**
 - 식생활교육 효과 제고방안,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강화, 농촌 취약계층 영양 보강
- **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단위 농촌정책기반 확충**
 - '제3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'의 내실화, 선도지구 중심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원
- **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**
 - 마을단위 공동급식 돌봄, 사회적 기업, 농촌공동체회사 등의 자생력 제고
- **「농촌융복합산업육성지원법」 도입으로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**
 - 6차산업화지원센터의 역할과 중간지원조직, 지역단위 로컬푸드, 전문인력 육성
- **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, 국제농업협력 강화로 국가경쟁력 제고**
 - 농업분야 국제협력 중장기방향 설정, 해외농업자원개발 대상지의 다양화 전략
- **통일준비시대의 남북농업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정 추진**
 - 공공부문 전문가 육성, 농업부문 경협정책 수립, 북한 농촌진흥정책 수립

1. 2015년 한국농업 여건 전망

- 2015년 세계경제는 3%대 초반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, 국내 경제성장률도 3.4%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

 - 국내경기 위축으로 고용증가 속도가 둔화되고, 가계소득도 정체 예상되며,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으로 국내 농식품 소비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므로 수요기반 확충이 필요

-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,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금융위기 가능성과 저성장,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어 달러화 강세에 의한 농업부문 영향 우려

 - 반면 일본 아베정부의 경기부양 기조에 따른 엔화의 양적완화 추진 등으로 엔저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대일 농산물 수출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수출선의 다변화가 필요
 - 원달러 환율은 1,080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식품 수출 경쟁력은 증가할 것이나 유로화 약세, 위안화 약세 등으로 인해 수출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
- 세계경제 저성장으로 석유 수요는 정체되고, 산유국 간 공급경쟁으로 국제유가는 평균 60달러 초반의 저유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투입재가격은 안정 전망

 - 저유가기조가 유지되면서 농업투입재가격의 하락이 전망되고, 가계소비지출도 증가할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농가교역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

- 쌀 관세화, 한·중 FTA의 실질적 발효, TPP 가입 추진 등 시장개방 불확실성은 제거되었으나 시장개방에 대한 농가의 대응형태에 따라 품목 간 생산구조 쏠림현상으로 일부품목의 수급 불확실성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

“

세계경제, 한국경제의
저성장으로 농식품
소비위축 전망

”

“

시장개방 후
한국농업 위기극복과
성장동력 확충이
과제

”

- 정부는 2015년부터 쌀 관세화를 결정하고, 513%의 관세율을 WTO에 정식 통보하였으므로 WTO 이행계획서 수정안 검증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쌀 관세화에 대한 심리적 우려가 제기되어 수급변동 가능성이 제기
- 한·중 FTA 협상 타결로 발효까지는 국회 비준이 남아 있지만 주요 농산물에 대한 양허제외에도 불구하고 다수 원예농산물이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발농업 대책이 필요
- 쌀 관세화 등의 농업시장개방 프레임이 설정되었으므로 이에 대응한 시장 피해최소화 방안, 농가소득 안정대책 마련, 경쟁력 확보 방안, 수출가능성 검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
- 지난해까지는 자연재해가 적어 풍년의 역설이 제기되었지만 올해는 자연재해로 수급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, 또 가축질병 발생 빈도가 증가하므로 수급안정대책이 중요
 - 농산물의 시장 경쟁은 심화되는 한편,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불안정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산물 수급안정이 과거보다 중요한 과제
 - 시장개방 지속, 농산물 소비 정체와 함께 자연재해와 가축질병의 잦은 발생으로 농업경영위험이 증가하고, 특히 대규모 자연재해와 가축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안정화가 중요한 과제
- 시장개방 영향, 농촌의 고령화 심화로 인한 농업성장의 정체,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 국내 농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이 요구되고, 다른 한편으로는 농가 간 소득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
 - 농업과 새로운 기술 간 융복합화, 6차산업화 등 농업이 ‘정체’에서 ‘성장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술개발, 자본유치 및 투자확대, 농업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실용화 촉진 등 다각적 접근이 요구

- 한편,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고령농의 소득 문제는 농업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
- **농촌인구의 감소, 농촌지역 취업자 증가율 저조 속에서도 귀농·귀촌 인력이 증가하고 있어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이 과제**
 - 농촌인구는 고령화 요인으로 면부인구가 감소하여 전국 인구의 약 18%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, 농촌지역 취업자 증가율도 0.23%로 도시지역 2.61%보다 낮은 수준
 - 귀농·귀촌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농촌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경제활동이 증가하여 농촌 사회적 경제, 농업의 6차산업화 등의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
- **농촌지역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‘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’ 추진의 1년차로 농촌의 새로운 활력이 기대**
 - 농어촌 지역개발,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농어촌지역 보건, 복지, 교육, 정주생활기반, 경제활동 일자리, 문화 여가, 환경 및 경관, 안전 등 7개 분야에 총 46.5조 원 투자지원계획이 수립
 - 이전 ‘2차 농어촌삶의질향상기본계획’ 추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추진체계 개선으로 효과성을 제고
- **북핵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, 남북 농업협력방안이 농정의 중요 과제로 대두될 전망**
 - 2015년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로 다른 해보다 남북교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, 정부도 ‘대통령직속통일준비위원회’를 출범(2014. 4.)시켜 남북 교류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
 - 남북교류가 본격화될 경우 북한의 식량문제 해소를 위한 농업부문 협력이 다른 분야보다 우선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식량, 농자재, 농업기술 등 분야별 협력 가능성과 추진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과제

“

농촌 삶의 질 향상,
통일농업 대응 등
새로운 과제 대두

”

“

시장개방 영향 대응
 농가경영안정대책,
 농가 자율 경영위기
 관리능력 강화

”

2. 2015년 주요 농정이슈

(1) 농가경영위기관리 강화

- 쌀 관세화(관세율 513%), 낮은 수준의 한·중 FTA 체결 등 농업의 대외여건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지만 대외개방 영향이 가시화되고, 거시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농가경영위기관리가 중요

 - 지난해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예단하기 어려우며, 품목별 작부체계 변동 등 수익성 급변 가능성이 제기되고, AI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확산되는 등 경영위기 요인이 불확실
 - 정부의 경영안정대책도 중요하지만 농가의 위기관리도 중요
-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시장개방 영향으로 농가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경우 보완

 - FTA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에 대한 정책개선으로 실효성을 제고하여 농가의 불안감 및 위기의식을 해소
 - 농업희생을 위한 논농업, 밭농업 직불제의 확대를 경영안정 추진
-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의 조기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구축

 - 가격불안정이 높은 채소, 과수 등에 대한 수입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양파, 콩, 포도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실시
 - 수입보장보험 실시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표준가격설정, 운영관리비용의 최소화 방안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
- 재해보험사업 및 재배보상대책의 내실화로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재해에 대한 농가안전장치로 위기관리대책을 강화

 - 농금원을 재해보험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보험가입률의 제고, 적합한 손해평가기법의 개발 등으로 재해보험사업 성과 제고
 - 농작업손해보험 도입 등 농업부문 보험사업의 확대와 실효성 제고

(2) 농업의 미래성장동력 확충

- 시장개방이 극대화된 여건에서 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농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과제

 - 농업부문은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농업생산지수가 2000년 이후 정체되고 있고, 농가 명목농업소득이 오히려 하락하는 문제 직면
 - 비농업부문과 성장격차로 인해 도농 간 소득격차(2013년 69.1%)가 확대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장동력 확충이 필요
- 농업의 고부가가치화,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업의 R&D 투자 확대와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촉진

 - ‘농림식품과학기술 5개년 종합계획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 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
 -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술이 적기에 개발 공급되도록 농업생산자조직에 대한 R&D 바우처제 도입, 품목별 생산기술 지도체제 강화
- 농업부문 자본유입 확대로 성장동력을 확충하도록 농업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

 - 농업법인제도의 개선으로 농업생산의 법인화를 촉진하고, 기업의 농업참여를 확대하도록 농지제도, 농업법인 소유구조 등 규제완화
 - 농업경영체의 규모화를 촉진하는 들녘별경영체 육성을 위한 직불금 등 자금지원과 농지이용제도 개선 및 업무영역의 범위를 확대
- 첨단농업생산단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농업금융지원 효율화와 농업의 금리부담을 완화

 - 첨단농업생산조직인 벤처농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여건의 조성
농신보의 신용보증지원체계 강화
 - 농가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사업성 기반한 신용보증 확대 추진

“

자본유입 촉진과
규제완화로
농업성장동력 확충

”

“

FTA를 활용한
농식품 수출확대로
농업성장 추진

”

(3) 농식품 수출활성화대책 강화

- **엔저현상으로 농식품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FTA 체결로 수출 기회가 확대되므로 농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**

 - 중국, 베트남, 뉴질랜드 등 FTA 타결 국가가 늘어나고 K-POP 등 한류 붐이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의 해외시장진출 기회 확대
 - 2013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1.4% 증가한 57.2억 불, 2014년은 전년 동기대비 8.6% 증가한 56.4억 불(2014. 11. 기준)
 - 농식품 수출에서 가공식품 비중이 높지만 국내 농산물 사용 비중이 낮아 농가소득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문제 지속

- **FTA 체결 확대와 한류 붐 확산을 농식품 수출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**

 - FTA 체결국가들 중심으로 수출 잠재품목 발굴, 국내생산-유통, 물류(수출시장 현지 물류센터 임차지원 등)-마케팅지원-수출시장 정착까지 맞춤형 일관 지원대책 수립

- **생산자와 수출업체를 계열화한 수출선도조직 육성 및 내실 강화**

 - 수출선도조직의 내실 강화로 수출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
 - 가공식품 원료 전문생산단지 조성, 생산자조직 육성으로 규격화된 가공식품 원료 생산공급기반 조성, 물류효율화, 안전성관리 강화
 - 식음료제조업체의 국내 농산물 원료사용 비중(물량 기준)이 29.7%인 것을 개선하여 농업성장과 연계 추진

- **농식품 비관세장벽에 대한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**

 - 비관세장벽 정보 수집·분석 제공, 협상 대응, 국내 대응 등 관련 기관 간의 역할 분담체계 구축
 - 농식품 위생·식품안전 관련 비관세조치 애로사항은 관련 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‘농수산식품 SPS협의회(가칭)’ 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구축

(4) 밭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수립

▣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분야인 밭농업은 성장
부문이지만 아직도 경쟁력이 부족한 상태

- 농업조수입 중 미곡 외 밭작물 작물 비중이 2000년 54.2%에서 2013년 72.7%로 증가, 미래성장 산업화의 주요 대상으로 중요
- 농작업 기계화율(벼농사/밭농사): ('00) 68% / 27% → ('13) 94.1 / 55.7
- 밭기반정비가 단순정비를 포함하여 14%만으로 취약한 구조
- 한·중 FTA 대책과 관련하여 밭농업 경쟁력 강화 중요성이 강조

▣ 밭농업 경쟁력 강화 관련 다양한 정책사업의 종합적 진단과 지원
체계 개편 및 예산 효율화 도모

- 밭농업의 지원대상을 노지채소, 노지식량작물(콩 등) 등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기반정비, 생산효율화 등 정책사업으로 지원
- 품목별 주산지 중심 농업인 간,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조직화 기반 예산 집행체계를 구축

▣ 밭기반정비 조기 확충, 기계화기반 구축 등을 위한 사업 대상 범위
확대 조정 및 예산 지원체계 전환

- 밭기반정비사업 대상범위를 전체 밭면적의 약 30% 수준으로 확대하고, 관련 예산 확대 및 광특사업에서 농특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
- 기계화 촉진, 투입재 산업 발전을 위한 범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

▣ 밭작물 중 미래성장 품목 변화 정보 제공 및 조직경영체 육성

- 전면적 개방 체제하에서 밭작물 주요 품목별 가격 예측 정보의 체계적 제공과 새로운 성장 품목, 시장 변화에 대한 정보 분석제공 확대 및 조직화된 경영체 육성 지원

“

밭기반정비의 조기
확충과 밭농업
조직경영체 육성

”

“

계약거래 등으로
생산자조직의 수급
및 가격조절기능

”

(5) 농산물 수급관리대책 강화

- 최근 연속적인 태풍 피해로 인한 농산물 가격급등현상과 기상호조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가격하락의 ‘풍년기근’ 현상이 번갈아 나타나는 고질적인 수급불안 지속
 - 금년에도 불확실한 기상변수와 함께 경제의 저성장 기조 지속, 대형 마트의 영업규제,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산물 수입증가 등으로 국내산 농산물의 수급 불확실성 심화와 품목 쓸림현상 등이 우려
- 품목 생산자조직 중심 생산 및 수급조절과 통합마케팅사업 육성을 통한 생산자조직의 수급 및 가격조절기능 강화
 - 품목 협동조합 등 생산자조직 중심의 계약재배와 상시 수매비축 및 방출체계 구축 운영, 비상 시는 품목조합 APC 비축물량을 정부가 조절
 - 품목 중심의 광역연합마케팅사업 강화 및 지역단위 통합마케팅사업을 집중 육성 지원하여 지역단위 수급조절 능력 강화
- 생산자조직-실수요처 간 계약거래 및 계약재배, 출하예약시스템 강화로 품목 수급의 사전 및 사후적 조절기능 확대
 - 소비지의 유통업체, 가공업체, 단체급식업체 등 대량 실수요처와 생산자조직과의 사전적인 계약거래시스템 확대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
 - 수확 후 산지와 소비지 도매시장 간 출하예약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출하조절을 통한 소비지 공급조절과 도매시장 가격안정화 도모
- 수급조절매뉴얼 운영 및 긴급수급조절 등 평시에는 시장자율조절기능 확대 및 비상 시 정부의 시장보완적 수급조절기능 수행
 - 비상 시 수급조절이 가능한 유통명령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품목생산자단체 중심 자조금제도 운영 확대로 국내산 농산물 소비확대 유도
 - 농업관측사업 강화와 관측정보의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활용도 제고 프로그램 마련으로 농업인, 생산자조직 생산조절능력 제고

(6)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재구축

- ▣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성 가축전염병 조기 근절과 가축 질병 청정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 요구 증가

 -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후 2개월 만에 구제역이 재발하고 AI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축산업이 위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
 - 현행 방역정책의 실효성 여부와 농가의 자체방역 활동수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
- ▣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

 - 축산 여건과 가축질병 발생 양상이 계속해서 변화하므로 이에 맞춰 국경검역·사전예찰·차단방역 시스템에 대한 현장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개선점 발굴 및 보완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 필요
- ▣ 농가와 관련 업계의 자율방역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현장 맞춤형 정책 도입 필요

 - 농가 자율방역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 중이나 아직 일선 현장의 방역 역량이 충분치 못하므로 현장의 방역 역량 향상을 위한 농가(관련 업체)단위 방역 활동 모니터링과 맞춤형 컨설팅 강화 필요
- ▣ ICT 기반 방역지원시스템(KAHIS) 고도화와 현장 조직 전문인력 확충 등의 지원정책 강화 필요

 - 과학적이고 신속한 방역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ICT 기반 시스템의 운영 고도화와 함께,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, 즉시적 초동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정책 수립 필요

“

가축전염병
방역시스템의 근본적
평가를 통한 재구축

”

“

식생활개선과
국민영양보장이
농정의 중요 과제

”

(7) 바른 식생활, 안정적 소비기반 확충

- ‘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’ 이 새롭게 추진되면서 식생활 개선과 국민영양보장이 농정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

 - 국민 영양의 불균형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, 특정 계층 특히 저소득계층과 노인·아동계층에서 영양소 부족 현상이 심각
 - 국가적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한 ‘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’ 이 추진되면서 농식품부에서 식품 소비정책과 식생활 지원 업무가 통합
- 관련 부처 간 연계를 통한 식생활 교육 효과 제고, 지역단위 식생활 교육 활성화 등 ‘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’ 의 효율적 추진

 -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목표로 가정·학교·지역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식생활 교육의 지침 및 식생활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, 농업과의 교류, 환경과의 조화, 전통 식문화 계승·발전을 추진
 - 어린이·청소년 대상 농업체험교육 활성화, 로컬푸드, 6차산업과의 연계,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 강화
- 소비자 소통채널 확대, 합리적 선택권 강화,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한 농식품 안심 소비 기반 조성

 - 소비자 참여형 종합정보망 운영, ‘농식품 정보누리’ 등 정보제공 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점점 확대
 - 식품통합표시에 대한 교육·홍보 확대,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 제고대책 강화
 - GAP 인증절차 개선, HACCP 컨설팅 지원,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등 사전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확대와 소비자 협력체계 강화
-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식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에서 국내 농업 및 생산자 연계가 가능한 식품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

 - 우수 농식품 구매 등 급식개선 지침 마련 및 식품지원 관련 제도와 연계 지자체, 타 부처의 식품·영양 지원 시 생산자 연계를 확대

(8) 지역단위 농촌정책 기반 마련 및 역량 제고

□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등에 대응한 ‘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’ 추진

- 올해부터 ‘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’ 추진에 향후 5년간 46.5조 원을 투입하는 등 농촌정책 영역이 확대
- 중앙의 농촌정책 확대에 맞추어 지자체의 농촌정책도 체계화 필요
- 전통적인 농정 분야 중심으로 추진하거나 단편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집중해온 그동안의 정책추진 방식을 개선

□ 지자체 단위의 농촌 삶의 질 향상 과제를 부처통합적으로 추진

- 농촌정책 분야가 지역개발 분야뿐 아니라 보건·복지, 문화, 교육, 안전 등으로 확대되므로 기획역량을 지닌 조직이나 통합적인 T/F에서 과제 발굴을 추진
- 지역 단위의 농촌정책을 향후에도 지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 팀 구성, 민간 전문가 채용 등 조직적 기반구축을 모색

□ 주민 체감도 높은 분야에서 지자체가 삶의 질 개선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창의적인 접근 모색

- 과소화·공동화 위기에 처한 농촌 마을의 활성화 해법을 모색하거나, 부처별 사업의 칸막이를 허물고 기초 서비스 시설과 프로그램을 복합 활용하는 등의 시도를 지자체 주도로 추진
-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이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같은 정책사업도 지자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투입

□ 민간 주체들이 지자체 농촌정책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

- 지역의 민간 주체들이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각종 사업 과정을 주도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
- 지역 단위의 각종 중간지원조직을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역할 분담

“

지역 단위에서
부처통합적인
농촌정책 추진기반

”

“
주민들의 다양한
생활서비스 수요에
대해 사회적 경제
영역의 확대
”

(9) 사회적 경제로 주민 서비스 수요 대응

- 농촌 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각종 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대하고, 귀농·귀촌 등 지역사회 구성원 다양화로 서비스 요구도 다변화

 -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필요한 다양한 요구를 공동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
 - 공공행정과 시장경제가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힘든 지역사회 서비스 수요에 대해 사회적 경제부문의 육성에 관심이 증대

- 농촌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활동의 영역을 탐색하여 확산

 - 고령 주민의 증가에 따라 현재 농촌에서 요구가 높은 마을 단위 공동 급식과 돌봄, 목욕탕, 공동생활홈 같은 서비스뿐 아니라 앞으로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찾는 작업이 필요
 - 효과적인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활동 현장사례를 발굴하여 제 공함으로써 농촌의 복지문제를 완화

-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해야 할 적합한 역할을 설정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

 - 사회적 경제 분야 활성화를 목적으로 여러 정부에서 인위적인 지원 수단으로 사회적 기업, 농촌 공동체회사, 마을기업 등 관련 조직을 육성
 - 사회적 경제 분야가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안착해서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제도 정비 방안 등 정부 역할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

- 기 설립된 각종 공동체 활동 조직들의 자생력 확보가 중요

 - 그동안 정부 지원사업으로 만들어진 농촌 공동체 단위의 경제활동 조직들이 어떻게 자생력을 갖고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활로를 찾는 노력이 지역 단위에서 필요

(10)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

- ▣ 6차산업화 육성을 위한 「농촌융복합산업육성지원법」 제정 등의 정책기반이 마련되었지만, 지역 단위 현장밀착형 지원체계 필요

 - 6차산업화지구 지정 및 6차산업인증 사업자 600개 지정목표를 설정하여 추진

- ▣ 광역 단위 6차산업화 지원센터의 활동과 병행하여 기초 단위에서 현장 경영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육성

 - 6차산업화 역량과 상황에 맞추어 지역 차원 펀드 조성을 비롯한 관련 사업 주체 지원 방안을 다변화하는 작업이 필요

- ▣ 6차산업화 유형별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 추진

 - 지역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6차산업화의 개념 및 유형화를 명확히 하고, 6차산업 관련 통계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
 - 마을, 기업, 농가 등 6차 산업분야 경영체 유형별로 우수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사례가 확산되도록 유도

- ▣ 6차산업화 관련 제도 개선 및 판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, 지역별 관광 협업 체계 구축과 서비스 개선을 추진

 - 소규모 가공 등 걸림돌이 되는 관련 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지역 단위에서는 로컬푸드, 직거래 등을 확산
 - 농촌 체험마을 등급제 전면 확대 시행으로 농촌관광 품질을 높이며, 시·군 등 지역 단위에서는 다양한 관광주체가 참여하는 지역별 농어촌 관광 협업 체계를 구축

- ▣ 지속가능한 6차산업화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 확충에 역점

 - 인력양성 프로그램 다변화, 우수 6차산업 경영체 인턴제 등으로 귀농·귀촌 인력 및 청년층의 6차산업 관련 업체 취업기회를 만드는 등 6차산업화 전문인력을 육성할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구축

“

지역 여건에 맞는
6차산업화 육성의
현장 밀착형
지원체계 구축

”

“

국제환경변화 대응
농업분야 국제협력
중장기 방향 설정

”

(11) 국제농업 개발협력과 농업의 글로벌화

□ 새로운 국제협력 질서 수립과 유라시아 등과의 경제협력 증대

- 2000년부터 추진해온 천년개발목표(MDGs) 시대가 끝나고, 금년 9월에 ODA 새로운 국제목표(‘Post-2015 개발아젠다’)가 수립
- 2013년 발표한 ‘유라시아 이니셔티브’가 본격 추진되면서 기존 동남아 이외에 극동러시아, 중앙아시아 등과의 경제협력이 증대

□ 국제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농업분야 국제협력 중장기 방향 설정

- 빈곤탈피와 식량안보 등 전통적 핵심분야 이외에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중점분야와 관련한 국제농업 협력사업 발굴
- 범정부적 중점협력국가(26개국) 축소 조정 및 국별 협력전략 수립 시 농업분야 국제협력사업의 중장기 목표의 반영 추진
- 국제협력사업의 실적 내실화를 위해 사업 발굴, 성과관리와 평가 등 사업관리를 강화

□ 전통적 농업개발 진출 지역(동남아 등)은 진출분야 다양화, 신규 경협지역(유라시아 등)은 농업자원 개발 중점분야 기반 구축

- 기 진출지역은 옥수수, 콩 등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위한 작물 재배 위주에서 상업작물, 축산, 농자재 등으로 그 대상 분야를 다양화하여 농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
- 곡물확보 인프라 투자 타당성 검토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해외농업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, 단계적 시행
- 해외농업자원 개발 대상지의 다양화 전략으로 유라시아 등 신규 경협지역에서의 농업투자 가능 분야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

(12) 통일준비시대의 농업협력대책

□ ‘통일준비위원회’ 출범 등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기가 형성될 전망으로 남북농업협력 및 통일대비 농업정책과제 추진이 필요

- 2014년 3월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서 3대 대북 제안의 하나로 ‘복합농촌단지’ 협력을 제안
- 동년 7월 ‘통일준비위원회’를 출범시켜 남북 교류협력과 한반도 통일준비의 본격화 예고
- 농식품부는 ‘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’에서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‘KREI 통일농업 아카데미’를 추진기로 심의

□ 공공부문의 ‘통일꾼’ 육성을 위한 ‘통일농업 아카데미’ 추진으로 남북협력 인프라 구축

-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비
- ‘통일농업 아카데미’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
- 2015년 농업부문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전문 인력 육성 등 경험을 축적

□ ‘교역형 복합농촌단지’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경협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방안 마련

- 시범협력사업 추진 가능지역을 선정하고 기본전략을 수립
- 복합농촌단지 협력의 추진단계별 세부사업 추진방안을 마련
- 남북 간 농산물 교역 및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

□ 통일준비시대 북한지역 농촌진흥 지원정책 수립

- 2014년 통준위 출범과 함께 국가적으로 통일 아젠다가 대두됨에 따라 농업부문의 정책 아젠다를 개발할 필요
 - 지속가능한 남북 농업교류협력사업의 추진
 - 한반도 농업통합 및 발전정책 아젠다 개발
- 통일농업 대계를 위한 중장기 연구과제를 개발해 수행

“

공공부문 전문가 육성,
농업부문 경협정책 수립,
북한 농촌진흥정책 수립

”



memo



memo



2015년

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(황의식, 이계임, 성주인)

2014년

- 제100호 농업·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(김동원, 박혜진)
-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(정학균, 김창길, 한석호, 서강철)
- 제98호 한·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(어명근, 이병훈, 정대희)
- 제97호 발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(채광석, 김홍상, 이용선, 김경필, 국승용, 문한필)
-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(어명근, 이병훈)
-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, 정책적 시사점(김미복, 박성재)
-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(송미령, 권인혜)
-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(김태훈, 승준호, 박동규)
-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(박기환, 김태훈, 지인배, 최병옥, 박동규)
-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(문한필, 정민국, 남경수, 정호연)
-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(박준기, 김미복)
- 제89호 한·EU FTA 발효 3년,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(지성태, 이현근, 남경수, 정민국)
-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(송미령, 성주인, 김광선, 조미형)
-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(이요한, 석현덕, 구자춘)
- 제86호 한·칠레 FTA 10년, 농업분야 이행평가(문한필, 정호연, 김수지, 김영준)
- 제85호 한·미 FTA 발효 2년,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(정민국, 문한필, 지성태, 이현근, 남경수)
-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(허덕, 한봉희, 김형진, 이형우, 김진년)
-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(황의식, 이계임, 송미령)

2013년

- 제82호 농업·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(김동원, 박혜진)
-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(정정길)
-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(정호근, 권오복, 석현덕)
-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(석현덕, 문지민, 박소희)
-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(서대석, 노호영, 이금호, 이형용, 한은수)
-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(허덕, 이형우, 김원태, 김형진, 한봉희)
- 제76호 해외조림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(이요한, 석현덕, 한기주)
-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(박동규, 승준호)
-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(석현덕, 박소희)
-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(송주호)
-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(허덕, 우병준, 이형우, 김태우)



-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(석현덕, 안선진)
-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(이용선, 우병준, 서대석, 승준호)
-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(김태곤, 허주녕, 양찬영)
-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(정호근, 석현덕)
-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(권태진, 임수경)
-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(박시현)
-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(김창길, 정학균, 문동현)
-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·군별 농업경쟁력 평가(이병훈, 윤종열, 윤영석)
-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(석현덕, 안선진)
- 제62호 한·EU FTA 발효 2년,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(문한필, 이현근, 남기천)
-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(성명환, 박지연, 정원희)
- 제60호 창조경제, 농업·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(박준기)
-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(성명환, 윤재웅)
-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(박기환)
-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(정원호, 최경환)
-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(송미령)
-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(김창길, 정학균, 문동현)
-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(정호근, 박소희, 석현덕)
- 제53호 농업·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(김용렬, 정학균, 민자혜)
-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(김성우, 노호영)
- 제51호 한·미 FTA 발효 1년, 농업부문 영향 분석(정민국, 문한필)
-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(박기환)
-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(김연중, 한혜성)
-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(지인배, 허덕, 송우진, 우병준)
-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(김용렬, 박시현)
-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(박현태, 박기환)
-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(정민국)
-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(석현덕, 장철수, 민경택, 정호근)
-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(강창용)
-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(김용렬, 성주인)
-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(강창용)
-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(이계임, 이동소)
-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(김정호, 박준기)

KREI 농정포커스 제101호

2015년 주요 농정이슈

등 록	제6-0007호(1979. 5. 25.)
인 쇄	2014. 1. 15.
발 행	2014. 1. 15.
발 행 인	최세균
편집위원	최지현, 김병률, 박준기, 성주인, 한석호
발 행 처	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-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-3 02-3299-4000 http://www.krei.re.kr
인 쇄	(사)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02-2269-5523~4 dec5523@hanmail.net

ISBN: 978-89-6013-685-4 93520

-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.
 -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.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.
-



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.krei.re.kr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-3 우 | 130-710

Tel 02-3299-4000 Fax 02-965-6950